



12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

2015. 12. 3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주요 금융개혁 성과 : 금융권 경쟁과 혁신 촉진..	1
1. 금융빅뱅	1
2. 금융개혁 70개 실천과제 추진현황	3
II. 11~12월 금융개혁과제	6
III. 주요 금융현안	9
1.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시행	9
2.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	10
3. 금융개혁회의 향후계획	11

I. 주요 추진성과

1. 금융빅뱅 : 무한 경쟁과 혁신

◇ 금융개혁이란 경쟁과 혁신을 의미

→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현

① 23년만에 은행업 인가 등 은행산업 본격 경쟁시대 도래

① (인터넷전문은행) 23년만의 은행 인가로써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(11.29)

* '16년 상반기 본인가 → 6개월내 본격 영업, 은행법 개정후 추가인가 계획

② (비대면실명확인) 금융실명제 도입('93.8월) 22년만에 영상통화, 생체인증(손바닥정맥) 등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실시(12.2, 신한은행)

③ (계좌이동서비스) 시행초기임에도 영국 수준('09년 시행)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→ 금융거래 편의성과 개인정보관리 안정성 확보

* 첫 달간 이용실적(10.30~11.30, 만건) : 접속 48.5, 변경 13.5, 해지 14.5
→ 영국보다 계좌변경 처리기간 단축(7→5영업일)

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은행권 경쟁과 혁신 촉진

○ 새로운 DNA를 지닌 플레이어가 등장하게 되어 '금융권 경쟁을 촉진'하고 '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'을 유도

②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"대출"에서 "투자" 중심의 환경 조성

① (11년만의 거래소 개편) 한국거래소를 코스피·코스닥 등을 자회사로 갖는 지주회사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

*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내년중 지주회사 체제 개편 등 추진

②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) 저금리 상황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,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

③ (크라우드 펀딩)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'크라우드펀딩' 시행('16.1월)

④ (사모펀드 규제완화) 사모펀드 운용사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, 펀드 설립 규제를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완화(10.25 시행)

➔ 모험자본 육성 및 투자중심의 자금조달 체계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실물지원을 확대하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선도

③ 22년만의 보험산업 개편

① (보험상품·가격 자유화) 보험상품 및 자산운용 규제를 사후·간접 규제로 전면 전환하는 규제개혁 방안 마련(10.16)

② (온라인보험슈퍼마켓) 온라인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·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(보험다모아) 오픈(11.30)

* 실손 25개, 자동차 11개 등 총 217개 상품 등재, 오픈 당일 약 6만2천명 접속

➔ 그간 판매채널 위주의 '양적 경쟁'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보장·가격의 상품이 경쟁하는 '질적 경쟁'으로 전환 유도

④ 금융과 IT 융합(Fin-tech)으로 새로운 금융모델 창출

① (핀테크 생태계 조성)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(상담지원 259건), 자금지원(296건, 2,733억원), 금융회사 전담조직 신설(52개사) 등

* 출자형태의 지원도 진행중(예: 신한은행은 2개 핀테크 기업에 15억원 출자예정)

② (핀테크 규제개선)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(3월), 사전 보안성심의 폐지(6월),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진입요건 완화 등
→ 간편결제, 간편송금,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등 출현

* 예)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→ 삼성페이(가입자수 100만명 돌파, 누적 결제금액 1,000억원, 일일결제건수 10만건) 등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

➔ 금융과 IT융합으로 금융의 외연을 크게 넓히는 한편, 국민들에게 기존에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

2. 금융개혁 70개 실천과제 추진현황

□ (경과) '15.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시 우선 50개 과제를 선정
→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 추가 발굴 및 세분화

□ (현황) '15.11월말 현재 70개 실천과제 중 57개과제를 확정·발표,
이중 45건의 과제는 금융개혁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

< 세부 추진현황 >

구분	건수
①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	24
② 일부 시행중인 과제	17
③ 방안은 발표했으나,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	16*
④ 방안을 마련 중인 과제 (미발표 과제)	13

* '16년 시행과제(5개), 금융개혁법안 관련 과제(6개), 하위규정개정중인 과제 등(5개)

□ (향후계획) 연내 대부분의 개혁과제를 확정·발표하되, 발표되지 않은 과제는 '16년 업무계획 등에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

< 12월 이후 주요 추진과제 >

구분	향후계획
▪ 공·사연금제도 개편방안	12월중 발표
▪ 소비자보호 규제 개선	12월중 발표
▪ 시장질서 규제 개선	12월중 발표
▪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	12월중 발표
▪ 금융윤리규범 제정 추진	12월중 발표
▪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	'16년초 추진
▪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	'16년초 추진
▪ 금융의 날 제정	'16년중 추진
▪ 국민 재산늘리기 프로젝트	'16년중 추진
▪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, 일자리 창출 등	지속 추진
▪ 증권·보험의 지급결제 참여	지속 검토

참고 금융개혁 70개 실천과제 추진현황

추진단계: ● 제도개선완료 시행중(24) ○ 방안발표, 일부시행(17) △ 방안발표, 제도개선 중(16) √ 방안마련 중(13)

번호	과제명	추진현황	추진단계
1	감독·검사·제재 개선 (코치 → 심판)		
1-①	금융위·금감원간 역할 정립	실행방안 확정 (7월)	●
1-②	컨설팅 검사 정착	검사·제재 개혁방안 (4.22)	●
1-③	기관·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	제재개혁 추진방안 (9.2)	○
2	시장기능 존중 (금융소비자 보호 여건 성숙 전제)		
2-①	금융회사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	자율성·책임성 제고방안 (8.13)	●
2-②	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	비교공시 강화방안 (7.27)	△
2-③	금융교육 강화	강화방안 (10.15)	○
2-④	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	역할 강화방안 (9.10)	○
3	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		
3-①	현장점검반 운영	현장점검반 출범 (3.26)	●
3-②	유권해석 및 No Action Letter 활성화	운영규칙 개정 (12.2)	●
3-③	금융규제민원포털 운영	포털 오픈 (3.31)	●
4	보수적 관행혁신		
4-①	은행 혁신성평가 개선	개선방안 발표 (7.9)	●
4-②	20대 금융관행 개선	20개 과제 발표 (11.16)	○
4-③	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	도입방안 (9.16)	△
4-④	금융권 일자리 창출	지속 추진	√
5	금융사 자율책임 정착		
5-①	금융사고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	자율성·책임성 제고방안 (8.13)	●
5-②	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	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 노력	△
5-③	금융 윤리규범 정립	12월중 추진	√
5-④	금융의 날 제정	행자부와 협의중	√
5-⑤	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	도입방안 발표 (7.6)	△
5-⑥	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	'16년초 추진	√
6	창의적 금융 우대		
6-①	금융회사내 제재·면책시스템 점검·개선	자율성·책임성 제고방안 (8.13)	●
6-②	금융권 성과주의 확산	지속 추진	√
7	기술금융 실태조사 및 질적성장 유도		
7-①	기술금융 실태조사 및 시스템 개선	기술금융 개선방안 발표 (6.8)	○
7-②	중소기업 정책보증 역할 강화	강화방안 발표 (11.4)	△
7-③	기업은행·산업은행 역할 강화	강화방안 발표 (10.30)	△
8	기술금융 규모 확대 및 투자 활성화		
8-①	기술신용대출 규모확대	로드맵 발표 (8.27)	●
8-②	기술가치평가 기반 투자 활성화	IP펀드 조성(6.29)	●
9	기술금융 전문역량 확충		
9-①	금융회사의 기술금융 역량 배양	전문 교육과정 실시 (8.18)	●
9-②	기술금융 평가 인프라 고도화	기술금융 개선방안 발표 (6.8)	○

번호	과제명	추진현황	추진단계
10	거래소 구조개혁		
10-①	코넥스 시장 활성화	활성화 방안 발표 (4.23)	●
10-②	파생상품시장 활성화	활성화 방안 발표 (4.23)	●
10-③	거래소시장간 경쟁 강화	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(7.2)	△
10-④	전자증권제도 도입	도입방안 발표 (5.21)	△
10-⑤	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	규제선진화 방안 발표 (6.1)	○
11	사모펀드·모험자본 획기적 육성		
11-①	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	강화방안 발표 (4.23)	●
11-②	벤처투자 활성화	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(7.20)	○
11-③	클라우드 펀딩 도입	자본시장법 하위규정 예고(7.23)	△
11-④	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	강화방안 발표 (10.14)	△
11-⑤	스튜어드십코드 제정	'16년초 추진	√
12	국가자산·민간금융간 시너지 창출		
12-①	자산운용 협의체 날 마련	12월 금융개혁회의	√
12-②	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	12월 금융개혁회의	√
13	핀테크 생태계 구축		
13-①	핀테크 지원 협의체 운영	지원협의체 출범 (4.14)	●
13-②	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	핀테크지원센터개소 (3.30)	●
13-③	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	확립방안 발표 (6.19)	●
13-④	전자금융법령 전면정비	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발의 (7.7)	△
13-⑤	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	위탁규정 개정안 시행 (7.22)	●
14	인터넷 전문은행 도입		
14-①	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마련	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발표 (5.18)	●
14-②	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	도입방안 발표 (6.18)	●
15	빅데이터 활성화		
15-①	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	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발표 (6.3)	△
15-②	신용정보집중체계 개선	'16.1.4일 출범 예정	△
16	금융규제 유형화·개선		
16-①	그림자규제 개선	그림자규제 개선방안 (9.18)	○
16-②	건전성규제 합리화	선진화 방안 (10.29)	○
16-③	영업행위 규제 개선	영업행위 규제개혁안(12.3)	○
16-④	소비자보호 규제 개선	12월 금융개혁회의	√
16-⑤	시장질서 규제 개선	12월 금융개혁회의	√
16-⑥	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	12월 금융개혁회의	√
17	칸막이 규제 완화		
17-①	복합점포 활성화	추진방안 발표 (7.3)	●
17-②	보험 판매채널 정비(온라인 슈퍼마켓)	보험다모아 오픈 (11.30)	●
17-③	보험업 진입·인가 기준 완화	인가정책 개선방향 발표 (5.26)	●
17-④	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	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(6.22)	△
17-⑤	보험업 경쟁력 강화	경쟁력 강화 로드맵(10.19)	○
17-⑥	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	'16년중 추진	√
17-⑦	증권·보험 지급결제참여 확대	지속 검토	√
18	신상품·신영역 개척 지원		
18-①	금융세제 개선안 마련 (중장기 포함)	세제개편안 국회논의중	△
18-②	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도입	세제개편안 국회논의중	△
18-③	은행 계좌이동서비스 개시	서비스 개시 (10.30)	●
18-④	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금융권 역량강화	활성화 지원방안 발표 (7.16)	○
18-⑤	해외 SOC 사업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	해외SOC펀드 출범 (8.17)	○
18-⑥	외환제도·규제 개선	외환제도 개혁방안 발표 (6.29)	○
18-⑦	100세시대 대비 상품개발	통합연금포털 오픈 (6.11)	○

II. 11~12월 금융개혁과제

1. 11월에 추진한 금융개혁과제

① 금융민원·분쟁 처리 개혁방안 (제14차 개혁회의, 11.12)

- 금감원 민원·분쟁 처리시스템의 신속성·효율성 강화* 및 금융회사의 민원 해결 역량 확충 유도**

* 단순·정형화된 민원 신속처리,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설치, 단순사항 ARS활용
 ** 금융소비자실태평가 공개, 민원분쟁 해결노력에 인센티브 부여, 자기책임원칙 강화

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·분쟁처리 서비스 제공 → 만족도 제고

②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 (11.18) → '16.1/4분기중 세척개정

- 경미한 사고발생시 범퍼 등 부품교환·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렌트카 지급기준을 '동종 차량'에서 '동급차량'으로 개선 등

➔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 전면 개선

③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(제15차 개혁회의, 11.26) 금일 11시 자료배포

- 총 1,064건 규제 중 영업행위 규제 521건 선정 → 협회·연구원의 191건 개선제안 중 132건 개선(업권법 발전방안 등 79건 포함)

* 은행·보험·금융투자업 경영·부수업무 사전신고 의무 폐지,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제중 전면금지된 본질적 업무의 일부를 위탁 허용, 독립투자자문업 도입 등

➔ 전업주의 근간은 유지하되 경영업무를 지속 확대하는 등 규제·감독 방식을 최대한 "Negative 철학"에 맞게 개선

④ 금융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

-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(11.25),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(11.26),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(12.2) 등

5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선 (지속 추진중)

1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(11.5)

* 필요성이 낮은 서류 폐지·통폐합(9개), 자필서명 횟수 간소화(9개)

2 휴면 증권투자재산 5,767억원 주인 찾아주기 (11.23)

*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상시조회시스템 구축, 행자부 협조로 파악된 미수령 주식 보유자 실제 주소지에 안내문 발송하는 등 캠페인 전개

3 금융투자상품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(11.24)

* 고령자(70세이상) 전담창구 및 상담직원 지정 운영,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 권유 유의상품 지정 및 판매관리 강화

2. 12월에 추진 예정인 금융개혁과제

1 (시장질서규제 선진화 방안)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주체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시 확대 등 추진

*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, 유사·중복 공시제도 대폭 개편, 회계부정 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수준 강화 등

2 (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) 국민체감도·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

* 약관·광고 관련 자율규제 및 당국의 사후제재 강화,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, 판매업자의 수수료·공시 등 설명의무 강화 등

3 (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) 행정지도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음부즈만 제도 도입 등 상시 점검·개선시스템 구축

*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 구성(10월) → 공청회(11.26) → 규정예고(12.2~) → 금융개혁회의 및 금융위원회 상정·확정(12월말)

4 (공·사연금 개선방안) 개인·퇴직 등 사적연금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민의 노후 안전판 확보

* 사적연금 활성화법 제정, 퇴직연금-개인연금간 연계강화 등

참고 현장점검반 운영현황

□ (11월 활동현황) 금융소비자 대상 현장점검 실시 및 불수용 과제 재검토 ('폐자 부활전')

○ 생·손보(11.24일), 카드(11.25일) 업권의 「현장메신저*」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

*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소비자 실무부서 직원으로 구성

- 12월중 은행, 금융투자 현장메신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, 향후 매월 현장메신저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 예정

○ 건의가 반복 제기되는 불수용 과제에 대해 소관 부서, 업계,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용가능한 대안 모색*

* (11월) 재검토 과제 선정 및 소관부서에 안건 전달, (12월) 업권별 재검토

□ (12월 활동계획)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개최 (12월 중순)

○ '15년 현장점검반 운영성과를 종합·정리*하고 향후 "현장중심 금융개혁"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

* 분석보고서 배포, '현장 중심 금융개혁 사례' 홍보영상 상영 등

※ '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'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현장점검반의 금융규제 개선활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

○ 금융이용자·소비자 편의증대 또는 신상품 개발로 이어진 우수 건의사례·건의자에 대한 '골드메달 수여'

* 현장메신저·협회 등 추천을 받아 업권별 포상 예정

➔ 내년에도 금융회사, 금융이용자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, 동일장소 재방문 등을 통해 개선조치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 예정

Ⅲ. 주요 금융현안

1.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시행

- (추진 배경) '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'(7.22)을 통해 빚은 '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' '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'는 원칙 제시
 - ① 금융기관의 "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"으로 개선
→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 취급 유도
 - ② 상환구조를 "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"으로 개선
→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"빚을 갚아나가는 구조"로 전환
- ➔ '여신심사 선진화방안'은 상기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,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은행 실무진 중심으로 초안 마련
- (주요 내용)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 →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여신심사 관행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
 - ① (객관적인 상환능력 평가) 원칙적으로 대출자의 소득은 증빙 소득을 통해 평가하고 이를 전산입력·관리하도록 함
 - ② (분할상환 관행 정착) 신규 주택담보대출, 고부담대출, 신고 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비거치식·분할상환 원칙 적용
 - ③ (Stress Rate 도입)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
 - ④ (총체적 상환부담 고려) 기타부채를 포함한 차주의 총체적 상환 부담(DSR)을 산출하고 은행 자율로 이를 사후관리에 활용
- (향후계획)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'여신심사 선진화방안'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여부에 대한 영향을 면밀 검토중
 - 12월중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同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

2.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

- (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)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을 선정하고,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신속히 구조조정 추진
 - 채권은행은 수시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을 선정(약 330개 내외) 하고 12월내 신용위험평가 완료 예정
 -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,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통한 신속한 시장퇴출 유도
- (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) 기촉법 개정 작업을 12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반 확립
 - 당초 기촉법의 상시화를 추진했으나,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만료기한을 2.5년 연장(~'18.6월)하기로 잠정 합의
 - 개정 기촉법은 채권자·채무자(기업)의 범위를 확대*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전망
 - * 채권자 : (기존) 채권금융기관 → (개정) 모든 금융채권자
(주채권은행이 일부 채권자 제외 가능)
 - 채무자 : (기존)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 → (개정) 모든 기업
⇒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
- (유암코 구조조정 추진) 유암코는 구조조정기업 중에서 정상화 가능성, 매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 투자대상 선정
 - 채권매입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복수의 예비투자대상에 대한 매각은행·차주와의 협의, 기업 실사·평가 등을 진행
 - 빠른 시일내 최종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채권·주식 등을 매입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 구조조정

3. 금융개혁회의 향후계획

◇ 금융개혁회의는 금년말에 종료하되, 내년도에 개편되는 금융발전심의회(금발심)에서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수행

□ 금발심 개편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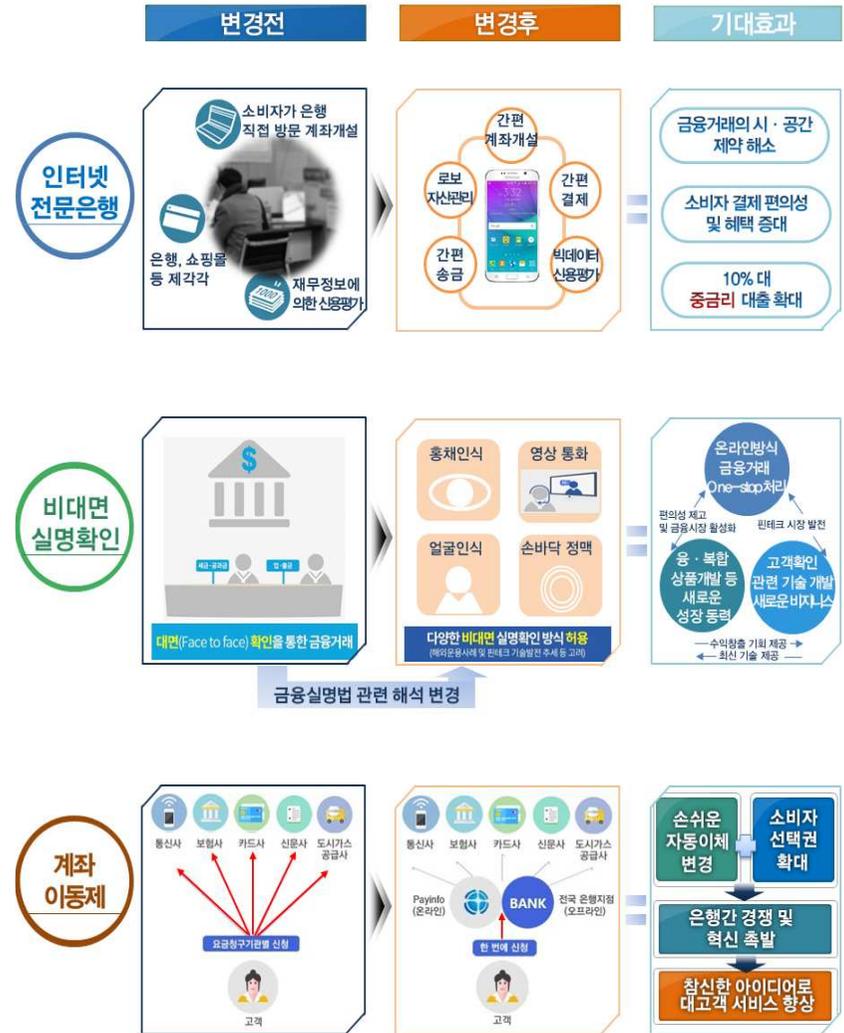
- ① 금융개혁회의 및 자문단 위원을 중심으로 금발심 개편(16년초)
- ② 금융소비자 분과를 신설하여 5개분과*로 운영
 - * 정책분과, 금융서비스분과, 중소기업금융분과, 자본시장분과, 금융소비자분과
- ③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「금융개혁 추진위원회*」를 설치
 -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·심의하고 기 추진된 방안에 대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·보완
 - * 금융개혁의 연속성을 위해 現 개혁회의 위원 위주로 선임 예정

□ 2016년 금융개혁 중점 추진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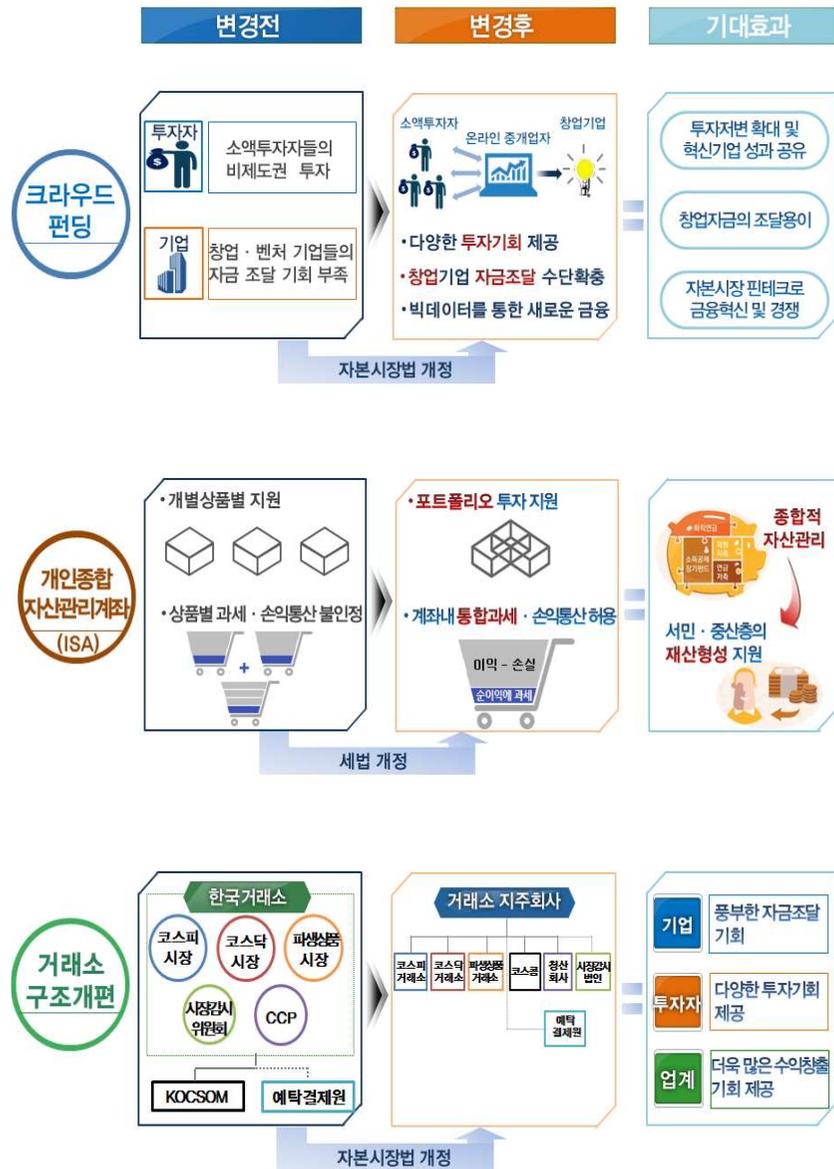
- ①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
- ② 기존 발표과제의 입법 및 하위규정 정비 등 제도화 및 후속조치
- ③ 금융개혁방안의 이행실태 점검 및 보완
 - 외부 전문 서베이 기관을 통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개혁성과에 대한 심층 평가
- ④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, 금융이용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잘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안되는지 점검
 - 특히, 동일 장소 재방문, 금융소외계층 방문 등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

참고 금융개혁으로 달라지는 금융시장과 금융 실생활

은행



자본시장



보험

